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유 연 갑\*

### I. 의의 및 시행 배경

손실보조는 한마디로 북한 기업과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사정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조'해 주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예기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북거래위험 경감상품이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대북거래를 국내 또는 제3국 거래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기능을 한다.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북 거래시에도 손실발생 위험은 상존하며, 오히려 남북간 체제의 상이성과 접촉, 왕래의 제한 등에 따라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기존 제

도를 통해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겠지만, 대북 거래시에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가 마련되어 금년 5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이 제도는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함께 마련되었지만 남북관계 불확실성과 세부기준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업계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특히 2003년 8월 남북간 4개 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주체인 통일부에서 민간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손실보조 제도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 II. 손실보조제도 내용

### 1. 대상거래 및 종목

손실보조의 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이고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교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지구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거래나, 우리 기업이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을 반입하는 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간접교역의 경우에는 손실보조가 남북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북측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실보조는 거래형태 및 위험대상에 따라 「반입손실보조」,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등으로 구분·운용된다. 「반입손실보조」는 계약에 따라 북측에 대금(원부자재 등 반출물자를 포함)을 선지급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물자를 반입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적후 반출손실보조」는 우리 기업이 북측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해당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을 포함)을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지연된 경우 발생한 손실을, 「선적전 반출손실보조」는 북측과의 반

출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물품을 제작하였으나, 해당물품을 북측에 반출할 수 없거나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 2. 대상 위험

손실보조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남북간 교역시 거래당사자의 귀책없이 발생하는 환거래 제한, 수용, 천재지변 등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우리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북한 기업의 파산이나 대금지체, 계약상의 결정적 하자나 납기지연 등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운송상의 위험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리 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물론 손실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실보조는 계약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있다. 즉 북측의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규격이나 내용이 계약명세서와 다르거나 수량부족 또는 불량률이 국제적인 관행을 초과하거나 아예 다른 품목을 선정한 경우 등에 그 시정 또는 배상이행에 장기간이 예상된다면 손실액을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반입의 경우〉

구 분	반입손실보조
비 상 위 험	① 북한의 반출제한/금지 ②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③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④ 기타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⑤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금지
신 용 위 험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이 반입계약서상의 납기일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③ 피약정자의 귀책없이 다음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시정 또는 배상이행에 6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 규격·내용의 상이, 수량부족, 불량률 초과, 이종품목 선적 등 * 단, 계약서상에 수령거절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발생시 복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는 경우에 한함

### 〈반출의 경우〉

구 분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비 상 위 험	① 북한의 환거래 제한/금지 ② 북한의 수입제한/금지 ③ 북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④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반출불가 ⑤ 제3국에서의 전쟁·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불능 ⑥ 당국간 합의에 의한 리스케줄링 ⑦ 기타 남한밖에서의 사유로서 당사자 귀책이 없는 경우	①~⑦ : 좌 동 ⑧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출의 제한/금지
신 용 위 험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의 대금 지급거절/지급지체(2개월이상) ③ 계약상대방의 물품 인수거절/인수불능 ④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대응물자 반입조건 경우)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계약불이행위험의 범주 및 약정조건은 반입손실보조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참조

## 3. 약정 조건

손실보조 약정한도는 기업당 5억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남북교역 실적 등에 따라 약정 한도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손실보조비율은 발생 손실액의 50%로 한다. 이는 손실액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손실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우리 기업이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 채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손실보조수수료는 약정금액에 소정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수수료율은 기본요율에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대북 교역실적 또는 제3국보증

제공 여부에 따라 최고 50%를 할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남북교역에 오래 종사한 기업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산정 등에서 우대된다. 예를 들어 북한과 교역실적 2년인 중소기업으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이고, 결제기간이 90일인 경우, 약정가액은 거래금액인 1억원, 약정금액은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를 50%를 곱한 5천만원이고, 해당 수수료를 0.572%로서 수수료는 28만 6천원이다.

### Ⅲ. 약정 및 지급 절차

#### 1. 약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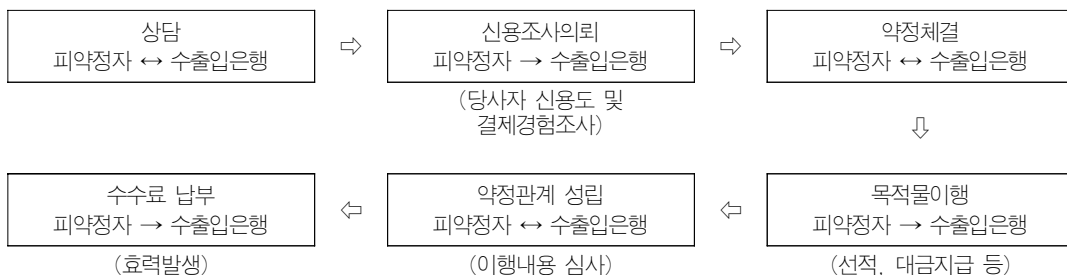
손실보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수출입은행(수은)에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하여 수은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 신청은 기업이 건별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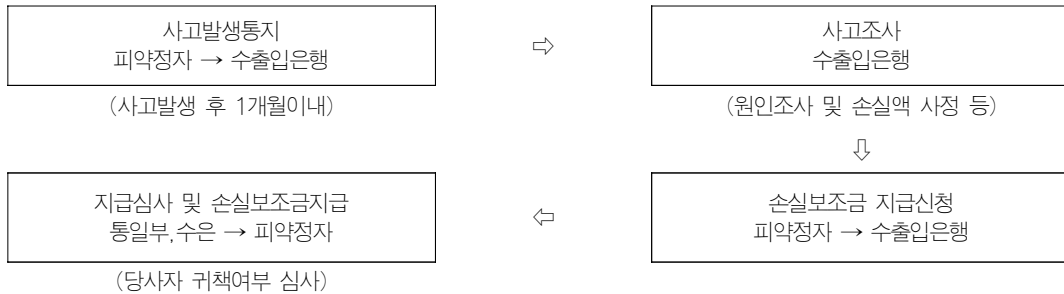
회전한도책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회전한도책정이란 동일한 남북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해당 북한 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손실보조 약정에 부칠 수 있는 최대누적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동일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손실보조 약정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손실보조 약정은 수은의 약정심사와 통일부의 결정에 따라 체결되며, 이때 해당 약관과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손실보조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조 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선행조건 즉, 반입손실보조의 경우 대금지급이나 선적후, 반출손실보조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반출 등 약정목적물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수은의 손실보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기업(피약정자)은 약정내용에 따른 약정목적물을 이행한 후, 동 사항을 수은에 통지하고 수은이 약정관계 성립통지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약정관계가 성립된다.

#### 〈약정 절차〉



### 〈지급 절차〉



이행된 목적물에 따라 손실보조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피약정자가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 2. 지급절차

손실보조 약정후 해당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약정자는 그 사실을 수출입은행에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 원인조사, 손실액 사정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 결정이 있게 되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조금은 통상 지급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IV. 전망과 과제

손실보조제도의 시행으로 약 480여개에 이르는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분야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

안 사업성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북 사업진출을 주저했던 기업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도 동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손실보조제도의 성격이 금융, 즉 대출이나 보증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손실액 산정 등을 포함한 제반 사고조사 기법의 도입 및 경험 축적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보완해 나아갈 분야도 많다. 금번 시행대상이 교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3/4분기 중에는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제도에 대해서도 통일부 협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북한의 개성공단내 또는 다른 지역에 대규모 투자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상위험에 의한 손실부담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